

II. 主要 懸案

1. 複數勞組 許容과 같은 민감한 勞動法規 改正 움직임

- '複數勞組 禁止'조항의 철폐로 強性 '第2 勞總'의 設立이 예상됨
- '第三者 介入 禁止' 條項이 철폐되면 現行 企業別勞組를 産業別勞組를 變化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임
- '政治活動 禁止' 條項 철폐되더라도 勞組의 政治活動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

- 勞動組合 관련 勞動法의 改정이 촉박해져 오고 있음
 -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 법안기초소위의 개정(안)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10월 17일 노동부장관의 국정감사답변을 통해 확인됨
 - 당초 노동법 개정은 9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철도·지하철의 파업과 현대중공업의 장기 파업 등으로 노사 관계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사실상 95년이후로 연기됨
 - 94년 6월 ILO가 노동법 개정을 재차 권고한 점과 노동법의 개정이 없이는 96년의 OECD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법 개정을 언제까지나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임
 - 95년도 임금·단체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음

- '複數勞組 禁止'조항의 철폐로 強性 '第2 勞總'의 設立이 예상됨
 - 노동계의 현황
 - 현재 노동계는 온건·보수적인 勞總 계열과 全勞代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 진보적 성향의 노조로 양분되어 있음
 - 全勞代 조합원은 약 50만 명 정도로 勞總산하 노조원 122만 명에 비하여 수는 작으나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 등 대표적 대형 노조들이 대부분 全勞代에 소속되어 한국의 노동 운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음

- 現 勞動政策의 문제점
 - 全勞代가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노대 관련 노조들을 法外로 두는 것은 노동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90년대 시작된 勞總-經總의 中央賃金合意('社會的 合意')가 기대했던

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비제도권 노조들의 반발때문임

- 94년들어 정치적 성향의 대형분규가 발생했던 것도 노동법 개정 및 제 2 노총 설립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음

- 複數勞組 許容의 파급 효과

- 上級 團體 複數勞組 許容으로 全勞代(全國 勞動組合 代表者 協議會)등 在野 性向 노조가 '第2 勞總'을 設立할 것으로 예상됨
- 否定的 側面: 단기적으로는 強性勞組 執行部의 立地가 強化되어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가 지금보다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
- 肯定的 側面: 이들 비제도권 노조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勞·使·政간(혹은 勞·使간)의 '社會的 合意'를 가능하게 하여 勞使關係의 安定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
- 非制度圈 勞組가 制度化되면 권한에 따른 책임도 부여되는 만큼 鬭爭 一邊倒의 노선이 政策指向的인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듯

○ '第3者 介入 禁止' 條項의 철폐로 勞動組合의 連帶와 産別勞組 지향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

- 在野勢力的 입김 커질 우려

- 3자 개입 금지 조항의 철폐로 우선 상당수의 구속노동자가 석방되고 수배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
- 동시에 재야세력의 노동운동에 대한 개입과 관여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. 하지만 노동조합이 과거에 비해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음

- 企業別 勞組의 連帶活動과 産業別 勞組로의 변신 움직임이 강화될 듯

- 否定的 側面: 노동조합의 조직이 산업별로 변화되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경영층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
- 肯定的 側面: 노조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임금 안정의 교환인 '사회적 합의'가 단위노조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산별노조하에서 달성된다면 오히려 개별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
- 산별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맹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해야만 함. 이는 곧 임금상승의 부담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더 커질 것임을 의미함

- ‘政治活動 禁止’ 條項 철폐되어도 노조의 정치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
 - 勞組의 政治活動: 특정 政黨에 대한 人的·物的 支援이라는 간접적 인 방법과 政黨 設立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예상할 수 있음
 - 간접적 방법이 채택될 경우 야당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
 - 그러나 정치활동 지향적인 재야노동계의 경우 직접 정당으로 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, 이 경우 정당의 색채는 기존의 보수 정당과는 이념적 지향이 다른 社民主義的 進歩 政黨이 될 것으로 판단됨
 - 현재의 여건에서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철폐되어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政黨法, 選舉法 또는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 등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으므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님
 - 현재의 정치관련법 아래에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어떤 利益團體나 社會團體도 特定 政黨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 없게 되어 있음
 - 또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은 勞動團體의 政治資金 寄附行爲를 禁止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징수나 노동조합 기금의 정치자금 유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임
 - 勞動組合의 政治活動이 완전히 保障된다면
 -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경우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입법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
 - 그러나 정치활동이 완전히 보장되더라도 그들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
 -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합법화와 노사관계의 성격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<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노사관계의 성격: 외국의 사례>

	정치활동에 대한 관심	정치활동의 내용	노사관계의 성격
미국	무관심한 편	보수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원	대립적
일본	보통	진보정당인 사민당과 보수정당인 민사당에 대한 지원	협조적
영국	관심이 큰 편	진보정당인 노동당에 대한 지원	대립적
독일	관심이 큰 편	진보정당인 사민당에 대한 지원	협조적
스웨덴	관심이 큰 편	진보정당인 사민당에 대한 지원	협조적

(체 창 균)